

자본시장 주요 제도개선 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

2023. 1. 26.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이 윤 수

Contents

I . 최근 제도 개선

II . 현재 진행중인 사안

III . 향후 추진과제

I. 최근 제도 개선

1.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 국정과제

(1) 공시 강화

기업공시서식 개정('22.10월)

물적분할의 구체적 목적, 상장계획, 주주보호방안 등을 충실히 공시

(2)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22.12월)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회사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 가능

(3) 상장심사 강화

상장규정세칙 개정('22.9월)

물적분할 후 5년내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노력 심사



I. 최근 제도 개선

2.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대책 발표('22.4월)

조각투자 사업 관련 위법행위 발생소지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각투자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안내

(1) 증권성 판단 원칙

조각투자 상품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 →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증권 가능성 ↑

(2) “조각투자 증권” 발행·유통시 자본시장법 적용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 유통할 경우 자본시장법 준수

(예 : 증권신고서 제출, 무인가 영업행위 및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불공정거래 금지 등)

(3)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고려사항 안내

가.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것

나.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다. 원칙적으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

3. 공매도 제도

※ 국정과제, 대책 발표('22.7월)

(1) 개인에 대한 공정한 공매도 기회 부여

금투업규정 개정('22.11월)

증권사 건전성 관리 및 개인의 신용위험, 해외사례(예: 일본 120%)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140→120%)

(2)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폭 확대

거래소 세칙 개정('22.10월)

-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한 투자자 주의환기를 위해 공매도 비중 30% 이상시 주가하락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종목 지정
-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하락률 5% 이상"시 공매도 금지를 익일로 자동연장

(3)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금투업규정세칙 개정('22.11월)

- 공매도 목적 대차 후 90일 경과시 금융당국 보고의무 부여
-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보고내용에 상세 대차정보(당일 시작 및 마감 대차잔고) 포함

I. 최근 제도 개선

4. 상장폐지 제도

※ 국정과제

(1)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

상장규정·세칙 개정('22.12월)

실적 악화 기업이라도 과거의 실적 등 정량적 요소 외
기업의 계속 가능성, 경영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상장유지 여부 결정

* (전환사유)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 2년 연속 매출액 50억 미만(코: 30억 미만),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2회(코) 등

• [최근사례] 코로나19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타격받은 여행·관광산업

- 중장기 성장가능성은 우수하나, 코로나19 등 대외요인으로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아 재무상황이 일시악화된 여행사
→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유지 가능

(2) 상장폐지시 이의신청 기회 적극 부여

상장규정·세칙 개정('22.12월)

정기보고서 미제출, 거래량 미달 등 일정기간내 정상화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발생시 해당 기업에게 이의신청 기회 및 개선기간 부여 → 정상화 유도

(3) 투자자 보호 효과 대비 규제준수부담이 높은 요건 개선

상장규정·세칙 개정('22.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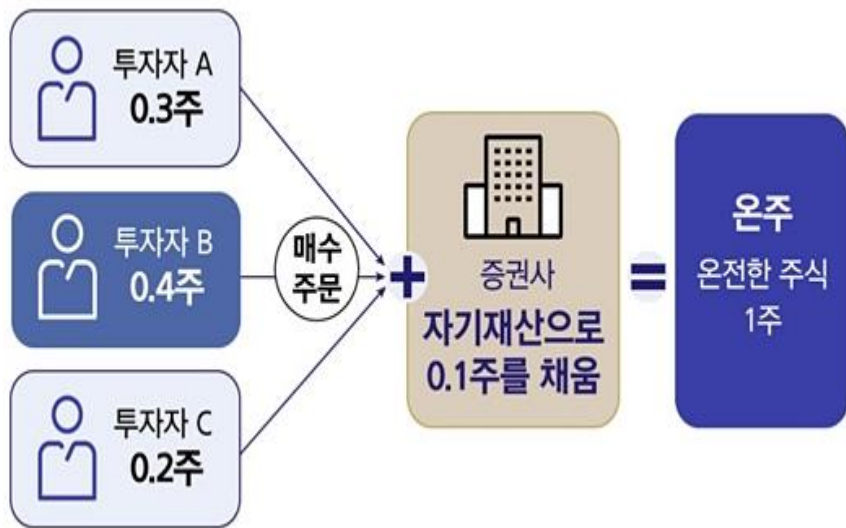
다른 상장폐지 요건으로 대체가능한 상장폐지 요건은 삭제하고
자본잠식, 정기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상장폐지 적용기준 변경(반기→연 단위)

I. 최근 제도 개선

5. 국내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가능 ※ 대책 발표('21.9월)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2.2월)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수요에 부응하여 신탁을 활용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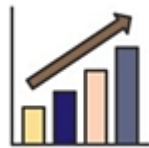
주요내용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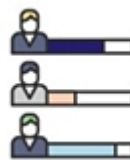
- ✓ 소수단위 주문을 온주로 바꾸어 거래
- ✓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고가주식 접근성 확대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 수취



소액으로 우량주 분산투자

< 거래 실적(22.9.26~12.30일 누적) >

※ 7개 증권사 서비스 중



거래금액 67.4억원 투자자 4.3만명

6. 코넥스 시장 활성화 ※ 코넥스시장업무규정 등 개정('22.5월)

(1) 기본 예탁금 규제 및 소액투자 전용계좌 폐지

기본 예탁금(3천만원 이상 예탁 필요) 및 소액투자 전용계좌(3천만원 한도) 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다만, 처음 코넥스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유의사항 공지 필요

(2) 코스닥 시장으로의 보다 용이한 이전(移轉) 상장 도모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요건(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완화*하고, 재무요건 평가없이 시총 및 유동성평가 중심의 이전상장 경로 신설

* 매출액 200억원 & 영업이익 10억원 & 매출 증가율 20% →
“ & “ & 매출 증가율 10%

(3) 코넥스 기업 상장 유지 부담 경감 및 거래 활성화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단축(상장 후 지속 → 1년)하고, 지분분산 10% 이상시 지정자문인의 유동성 공급 의무 면제

7. 신탁업 혁신방안 발표('22.10월)

※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중

금융·비금융기관(병원,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 협업을 통해 가계가 보유한 다양한 재산의 종합적 관리 및 금융·비금융 서비스 융합 기대

중소·혁신기업의 보유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마련 기대

가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

- ① 취급 재산 다양화
- ② 신탁회사의 비금융 전문기관 활용 제고

나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 ③ 신탁을 통한 수익증권 발행 허용

다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탁

- ④ 가업승계신탁·주택신탁 관련 제도 정비
- ⑤ 복지신탁 활성화(후견신탁 등)

라 소비자 보호 관련 규율 정비

- ⑥ 행위원칙 강화(선관의무 등)
- ⑦ 신탁 보수·홍보 등 관련 관행 개선

8. 퇴직연금 / 개인연금 제도

(1) 납입 단계

'23.1월 시행

더 많은 금액을 퇴직/개인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세제유인 강화

* 세액공제한도 : [기존] 年 700만원 → ['23.1월 이후] 年 900만원

(2) 운용 단계

디폴트옵션('22.7월), 일임·자문 연계형 연금저축펀드('22.10월) 시행

- (퇴직) 퇴직연금이 방치되지 않고 자동으로 운용되도록,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 [승인현황] 38개 사업자의 220개 신청 상품 중 165개 (75%) 승인

[상품현황] 금리, 펀드보수, 중도해지 패널티 등의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품 선정

[관리계획] 운용이력이 짧은 상품 중심으로 성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완전판매 여부 점검

- (개인) 일임·자문 연계형 연금저축펀드의 세제 적격성 (유권해석, '22.10월)

*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물론, 일임·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도 세제적격성 인정

I. 최근 제도 개선

9. 디폴트옵션 도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시행('22.7월)

기존

✓ 운용지시

별도 지시가 없으면, 기존 운용 지속(방치)

✓ 문제점

퇴직연금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데 한계 → 낮은 수익률

개선 : 디폴트옵션

✓ 운용지시

별도 지시 없이 일정 기간 경과시, 고객이 지정한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

✓ 기대효과

시장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용으로, 수익률 제고 기대

※ 디폴트옵션 적용 절차



10.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 자본시장법령 개정·시행(22.8월)

(1) 운용·판매 책임성 강화

공모펀드의 고유재산투자(시딩투자) 의무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
소규모펀드(부진펀드) 정리 활성화

(2) 운용 효율성·투자자 접근성 제고

펀드 투자전략 변경 간소화, 펀드투자자 확대 절차 개선,
인덱스펀드 규제 합리화

(3) 투자자가 원하는 새로운 상품 출시

외화표시 MMF 도입, 다양한 혼합형 ETF 도입,
만기 수익추구가 가능한 채권형 ETF 도입

I. 최근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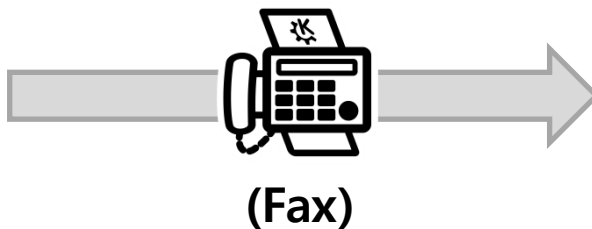
11. ISA 계좌이전 전산화

※ '22.12월말 현재 36개사 중 23개사 참가 → '23.상반기까지 전 기관 참가 및 구축 완료 예정

기존 : FAX 방식



기존 거래
금융기관



(Fax)



신규 거래
금융기관

✓ 수작업(Fax 송부)

✓ 장시간 대기로
고객 불편 초래

개선 : 쏠 과정 전산화



기존 거래
금융기관



(‘22.11.28 예약원 시스템 오픈)



신규 거래
금융기관



대기시간 단축
고객편익 도모

✓ 수작업(Fax) → 「계좌이전 쏠 과정 전산화」

12.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 대책발표('22.9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중

(현황) 상장회사 내부자의 미공개정보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규제^①, 사후적 규제^②는 규정 중이나, '사전적·예방적' 규율·감시체계 부재

* ① 미공개정보 이용금지제도 ② 단기매매차익 반환, 사후공시 제도

(개선) 현행 사후공시 체계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

- (공시의무) 상장회사 임원·주요주주의 거래계획 사전공시(최소 30일전)

* 총 주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 (적용예외)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변동, 성격상 사전공시 곤란 거래 제외

* (예) 상속, 주식배당, 주식양수도 방식 M&A 등

- (실효성 확보) 미공시·허위공시·거래계획 미이행시, 형벌·과징금 등 제재

I. 최근 제도 개선

13.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 대책발표('22.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나,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수단 부족으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

* ① 수사·소송에 장기간 소요 (평균 2~3년)

② 엄격한 입증책임 요구로 기소율 및 처벌수준 미흡 (검찰 불기소 55.8%, 집행유예 40.6%)

③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지속 발생 (증선위 조치 전력자 비율 21.5%)

⇒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등 대응역량 대폭 강화

(1)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과징금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①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법률 명시('총수입-총비용') 박용진 의원안('20.6월)

② 불공정거래시 과징금을 부과하여 경제적 제재 윤관석 의원안('20.9월)

(2)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① 자본시장 거래(금융투자상품 거래, 계좌 개설) 제한,

②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조치 도입

I. 최근 제도 개선

14. (상환)전환우선주 규제 정비

※ 대책 발표('22.9월), 증발공 개정안 규제위 검토중

(배경) CB에 대한 콜옵션·리픽싱 규제도입('21.12월시행) 이후 (상환)전환우선주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 및 풍선효과 우려 제기

< 상장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 콜옵션·리픽싱 조건 부여 규모(억원) >

	'21.9	10	11	12	'22.1	2	3	4	5	6
콜옵션	0	0	625	46	0	0	15	1,115	2,146	877
리픽싱(하향)	1,430	0	2,525	269	0	148	561	0	2,567	820

(개선)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서도
콜옵션·리픽싱 규제 (CB·BW와 동일하게) 도입

- (1) (콜옵션)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콜옵션 행사한도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고, 관련 공시 의무 부과
- (2) (리픽싱) 상장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사모발행하는 경우, 주가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

15. ESG 공시기준 국제 논의 대응(계속) ※ 의견서 제출('22.7월)

IFRS 재단 산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글로벌 ESG 공시기준 제정을 위해 “IFRS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 발표('22.3월)

⇒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측 의견서** 제출('22.7월)

- * 일부 공시 요구사항 완화, 구체적인 지침 제공,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ISSB기준 공개초안 주요 내용	한국측 검토의견
▪ (중요성 판단) 기업 스스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중요성(materiality)'을 판단하여 공시	☞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불분명 → 구체적인 판단 지침·예시 제공 필요
▪ (보고빈도)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	☞ 한국은 재무제표(3월말)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통상 7월 이후) 공시시기가 달라, 충분한 준비시간 필요
▪ (산업전반 지표) 산업 불문, 모든 기업은 Scope 3* 배출량 공시 * 기업 가치사슬 전반의 간접 배출량 (예: 협력사 배출량)	☞ 비용-효익간 균형 고려, 해당 정보가 중요한 특정 산업에서만 요구 및 중소기업 적용 제외 제안

16. 감사인 지정제도

※ 외감규정 개정('22.9월)

기업·감사인 군(群) 분류 체계를 개선하고,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감사인 지정제도와 연계하여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향상 도모

회사·감사인
지정군분류 개선

- ☐ 회사 지정군 수 축소 및 자산구분 체계 합리화(타 법령과 일치)
- ☐ 품질관리 및 손해배상능력 등 감사인 지정군 기준 강화

회계법인 품질
관리 개선 유도

- ☐ 품질관리감리 및 품질관리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점수에 반영
- ☐ 부실감사에 따른 지정제외 점수 부과 효과 강화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

- ☐ 감사위험 높은 기업은 하향재지정 배제 등 하향재지정 사유 정비
- ☐ 비상장사는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에 우선 지정

17.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 대책 발표('22.10월), 외감법 개정('22.12월)

- (1) 소규모 상장사(자산 1천억 미만) 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
대형비상장회사 범위 축소(자산 1천억 이상 → 5천억 이상*)

*자산 1천억원 유지 기업: ❶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❷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

- (2) 인력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설립** (거래소 내)

* 기업/감사인 의견교환 활성화를 위한 실무 사례집 배포, 금융복합상품 회계처리 지원 등

** (예) 회계기준 관련 질의회신서 작성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등

- (3) 비상장 소규모기업 별도 감사기준 제정 → 외부감사 부담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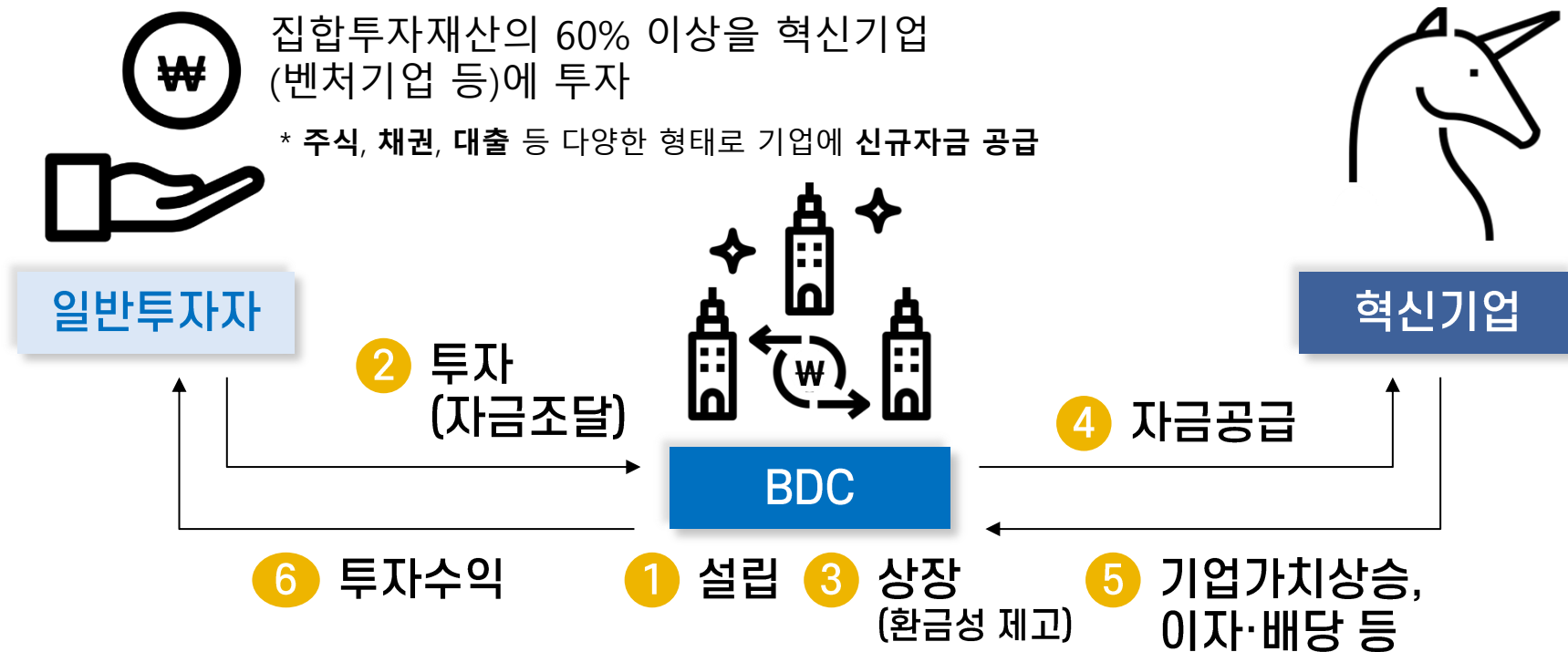
- (4) 경영진·내부감사의 회계관리 의무 강화*,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확대(건별 포상한도 기준액 5억원 → 10억원)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 강화, 경영진 내부회계 자율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II. 현재 진행중인 사안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계류중('22.5월)



- ✓ (일반투자자)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있어도, 적절한 투자수단 부족
- ✓ (혁신기업) 정책자금 외에 적절한 자금공급원이 없고, scale-up 단계 자금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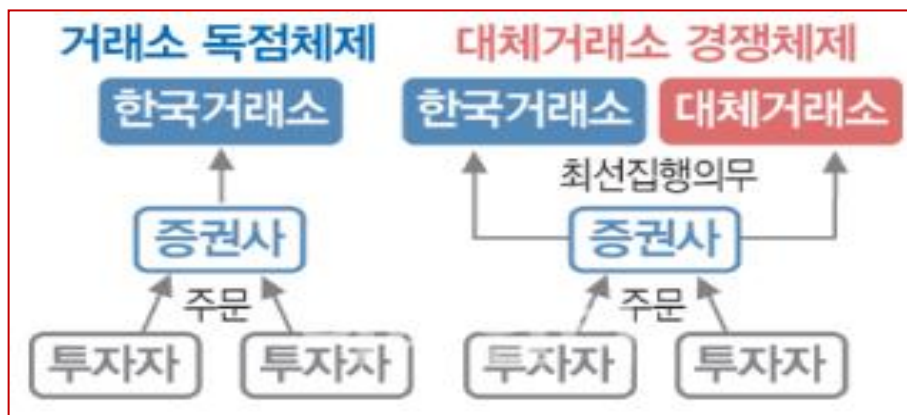
→ BDC 도입을 통해 일반투자자-혁신기업간 투자공급-수요 미스매치 완화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

※ 인가설명회 개최('22.11월)

자본시장의 시장간 경쟁 촉진 및 투자자 편의 개선을 위하여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대체거래소) 도입 추진

“거래소 독점구조
완화·해소,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도모”



인가설명회를 통해 인가정책 및 인가심사 가이드라인* 에 대한 상세 설명
→ 금년 3월말까지 인가신청을 받아 금년중 신규인가를 목표로 추진

* 금융위, 금감원, 자본연, 금융연, 코스콤 등 시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T/F를 통해 마련 ('21.12월~)

II. 현재 진행중인 사안

3.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강화

※ 대책 발표('21.5월), 자본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계류 중

(1) 미등록 금융투자자문업 원천 차단

온라인 양방향 채널(리딩방)을 통한 유료 서비스 제공은 투자자문업,
유료회원제(예: 멤버십 서비스) 개인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대상으로 명확화

단순 광고수입	➡	자유업	투자자로부터 직접적 대가 수취	➡	유사투자자문업
-		-	1:1 개별상담	➡	투자자문업
-		-	<제도개선시> 채팅방 개설	➡	투자자문업

(2) 유사투자자문업 관리 강화

‘진입-영업-퇴출’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3) 불법행위 단속 강화

매년 일제·암행점검으로 불법 투자자문·일임 영위 업체를 적발하고,
정기 직권말소를 통해 법령위반, 교육미이수 등 부적합자 퇴출 노력 중

4.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관련 ※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21.11월)

(1) 인가절차 신속 · 간소화

- 금투업 추가등록제를 도입하여 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
 - * 22년 추가등록제 적용 인가 3건
- 인가 · 승인 사항 위임전결을 확대하여 인가 절차 간소화
 - * 리츠 등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 위임전결 완료, 금융투자업 추가등록제 위임전결 예정('23년 上)

(2) 금투업 인가·등록증 발급으로 금융행정의 공식성·신뢰성 제고

- * 인가증 26건, 등록증 290건, 추가등록 2건 등 발급('23.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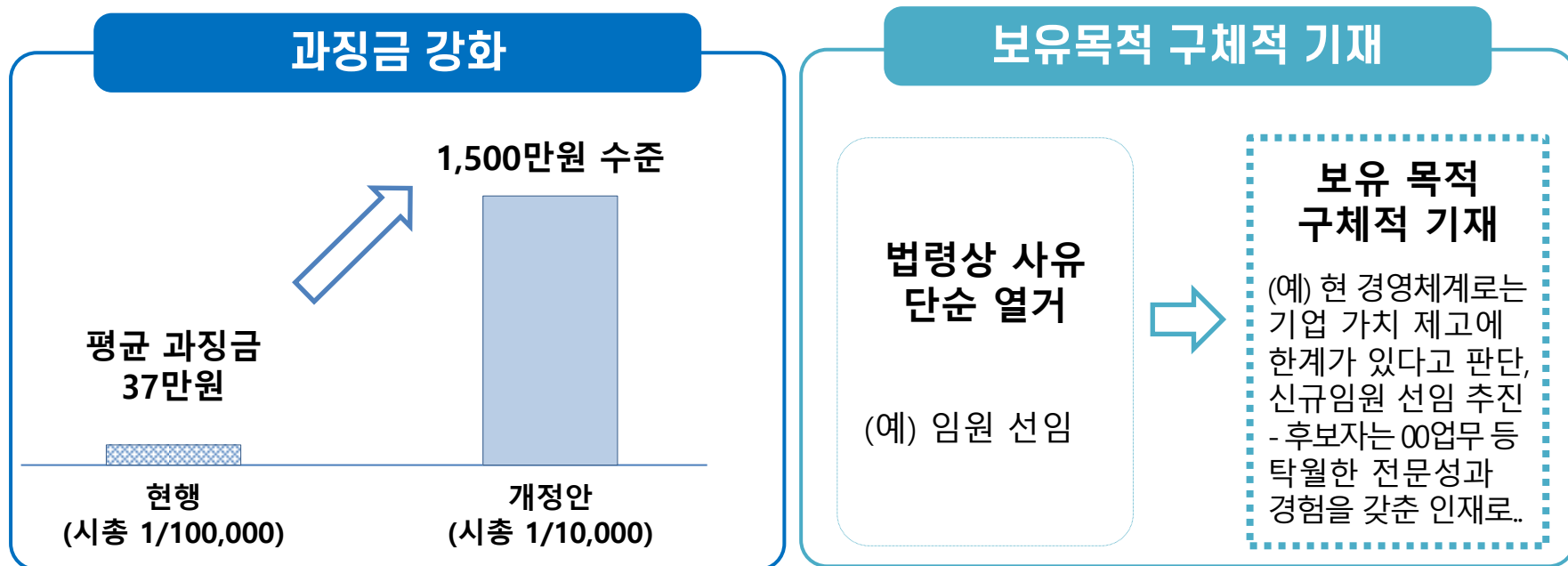
(3) 인가관련 제도개선 지속 검토 추진

- 인가체계 개편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사항 보완

5.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제도 개선 ※ 대책 발표('22.8월), 자본법 국회제출('22.12월)

(1) 5%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 투자자 보호 강화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 1만분의1)

(2) 5% 보고시 주식 등의 보유목적에 구체적으로 기재
→ 경영권 경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6.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 대책발표('22.1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중

(현황) 우리나라 M&A는 '주식양수도' 방식이 대다수*이나,
합병 등 타 유형에 비해 **피인수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 미흡**

* 기업결합 유형별 비중(% , '21년) : (주식양수도) 84.3 (영업양수도) 13.8 (합병) 1.9

< 우리나라 M&A 관련 주요 주주보호 장치(현행) >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	
	인수회사	대상회사	인수회사	대상회사	인수회사	대상회사
주주총회 결의	0(소규모X)	0	0(중요양도)	0(중요양도)	X	X
주식매수청구권	0(소규모X)	0	0(중요양도)	0(중요양도)	X	X

(개선) 주식양수도 방식의 M&A를 통해 발행주식의 25%이상 취득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50%+1주 이상**
공개매수를 의무화하여 **소액주주 권리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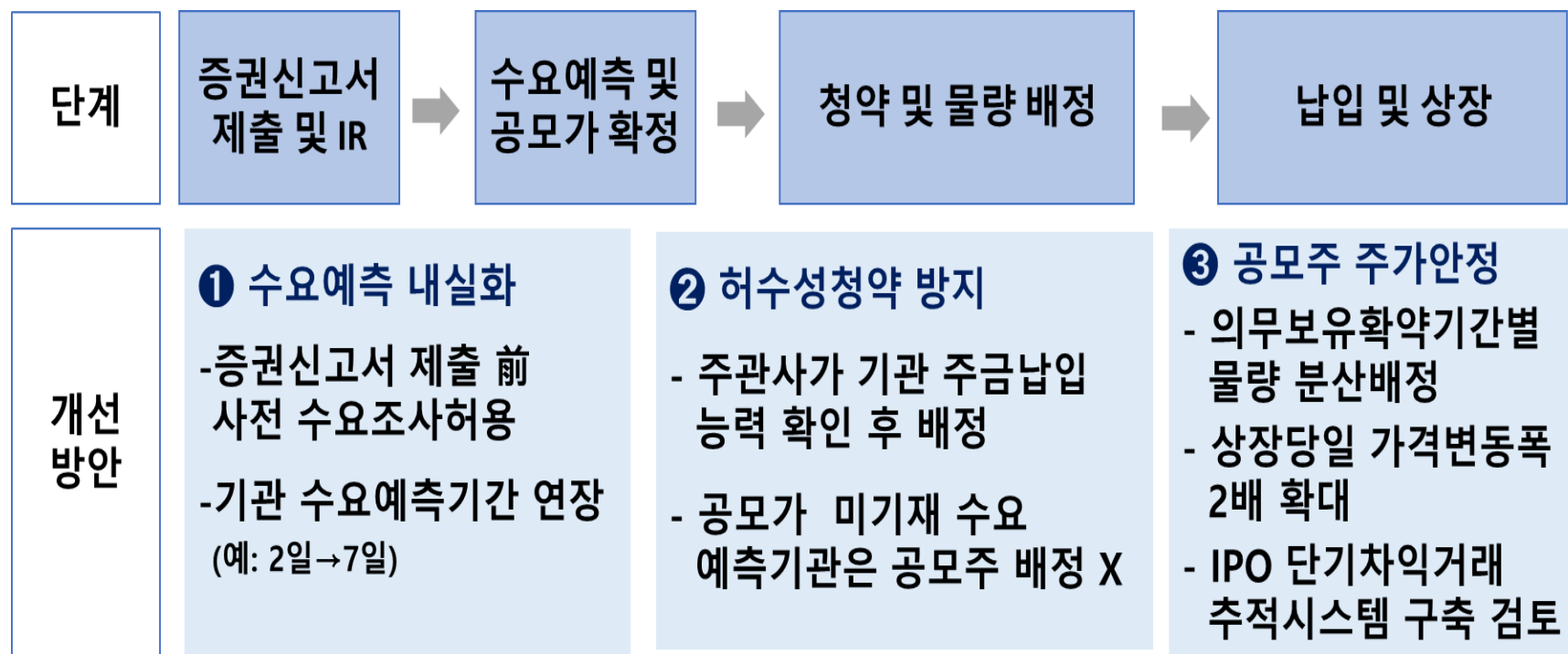
※ (해외사례)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가는 일반주주 보호방안 마련

* 영국/EU는 의무공개매수, 미국은 이사회적 적극적 역할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 보호

7. 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

※ 대책 발표('22.12월)

IPO 주관사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원칙을 바탕으로
IPO 단계별 건전한 IPO시장 육성·관리 도모



8. 자산유동화 제도 전면 개편 ※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23.1월)

(1) 등록유동화제도 정비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 ABS 발행가능 기업범위 확대*(BB등급 이상의 신용도 요건 폐지)

*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감대상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하위규정 구체화)”로 제한 예정

- 유동화자산 및 구조* 다양화, 주식회사 형태의 SPC 허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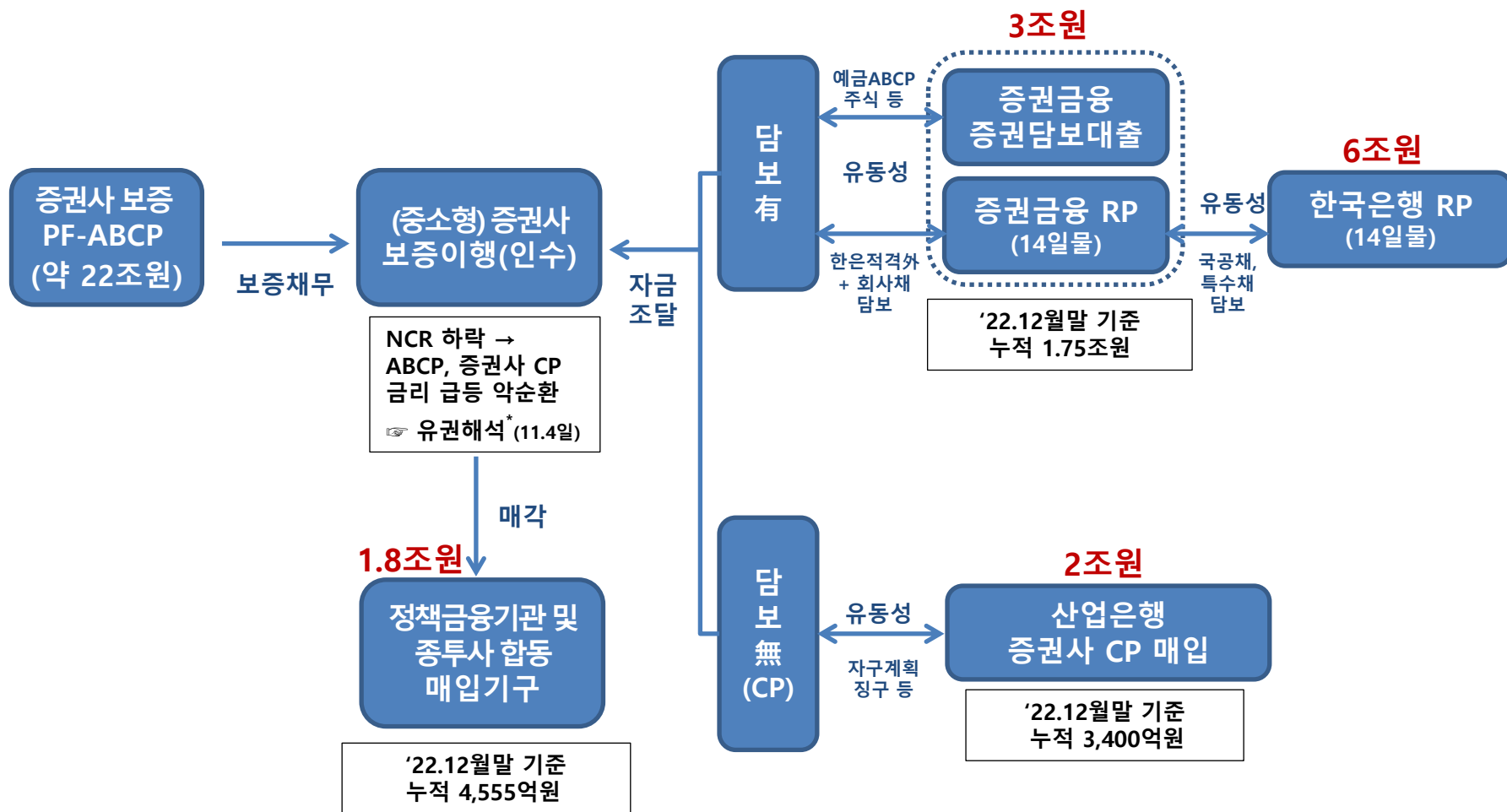
* 장래에 발생할 채권, 지식재산권까지 유동화 대상자산에 포함하고, multi-seller 유동화 허용

(2) 유동화증권 전반(등록+비등록)에 걸친 리스크 관리 강화

- 기초자산 부실위험 관리를 위해,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5%) 보유토록 의무화(위험보유규제 도입)
- 유동화 관련 정보(기초자산, 거래참여기관, 신용보강 등) 공시체계 마련

II. 현재 진행중인 사안

9. 단기자금시장 유동성 관련 시장안정조치 ※ 증권사 유동성 지원(22.11월~)



* (NCR 관련 유권해석) 증권사가 지급보증한 유동화증권이 차환발행되지 않는 경우 이를 **직접 매입**하는 것을 허용(직접 매입시 NCR 위험값 : 32%) → Fire sale 가능성 완화

10.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1) 대내외 경기여건 및 시장상황 고려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으로 증시 위축
→ 시장 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과세할 경우 시장 충격 우려

(2) 세제 집행 가능성 및 납세자의 과세 수용성 문제

현장에서 금투세를 집행하기도, 납세자들이 이를 수용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

⇒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다양한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 증시 매력도 제고

* 세제 개편 관련 여야합의 내용('22.12.22일) : 금투세 시행('25.1.1일), 주식양도소득세 현행 유지(대주주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22년 0.23% → '23년 0.20% → '24년 0.18% → '25년 0.15%)

(1)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및 향후 과제 (제1차, '22.9월)

- ❶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 ❷ 일반주주 보호 강화 →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22.9월), 상장폐지 절차 개선('22.10월)

(2) 자본시장의 우리경제 혁신성장 및 국민자산 증식 지원 (제2차, '22.10월)

- ❶ 모험자본 공급 촉진 → BDC 도입(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계류중, '22.5월)
- ❷ 사모펀드 체계개편의 성과와 과제 → 既 발표('21.8월) 사모펀드 개편방안 후속조치 이행 중
- ❸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 연금사업자-非사업자간 공정경쟁기반 조성, 운용규제 합리화 등('23년)

(3)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 (제3차, '22.11월)

- ❶ 내부자거래 및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22.9월), 의무공개매수제도('22.12월)
- ❷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의결권 자문사 규율
- ❸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 불공정거래행위자 자본시장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제한('22.9월)
- ❹ ESG 공시제도 개선 → 해외동향 등을 감안한 ESG 공시 정비방안 검토('23년)

(4)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제4차, '22.11월)

- ❶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23.1월), 배당절차 선진화('23.2월)
- ❷ 자본시장 건전성 및 경쟁력 강화 →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22.12월)

Ⅲ. 향후 추진과제

◆ 국정과제 제도화, 국제 정합성 & 선진화, 주주·투자자 권익보호, 혁신성장 지원 ⇒ 자본시장 매력도 ↑

1.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2.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3. 배당절차 선진화
4. 토큰 증권 발행·유통 체계 마련
5. 공모펀드·주식형펀드 등 간접투자 활성화
6. 하이일드펀드, ISA 기능 제고
7. 퇴직연금 운용규제 정비
8. ESG 공시
9. 리스크 관리 및 시장안정
10. 회계제도 평가·보완